

‘서울형 주택바우처’, 5만원 쥐꼬리 지원에 수급자 외면

고시원까지 수혜 대상 늘렸지만
실제 보조 받는 가구는 4.79% ↓

동일 조건에 최대 18만원 더 받는
주거급여지원 사업으로 몰려
까다로운 절차, 신청 기준 등 지적

〈서울형 주택바우처 지원 사업 추진 실적〉

단위: 가구, %, 백만원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합계
지원가구	6,680	6,413	6,194	5,695	5,792	5,695	5,526	5,422	47,417
증감 수	-	-267	-219	-499	97	-97	-169	-104	-1,258
증감률	-	-4.00	-3.41	-8.06	1.70	-1.67	-2.97	-1.88	-2.90
집행액	389	371	354	330	330	330	318	312	2,734

/자료=서울시

서울시가 취약계층에게 주거비를 보조해주는 ‘서울형 주택바우처’ 대상을 고시원 거주자까지 확대했지만 실제 지원을 받은 가구가 올 들어 지난 8월까지 월평균 약 3%씩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이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에는 지원금이 적고 신청 기준과 절차가 까다롭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시에 따르면 서울형 주택바우처 지원 가구는 올해 1월 6680가구에서 2월 6413가구, 3월 6194가구, 4월 5695가구, 5월 5792가구, 6월 5695가구, 7월 5526가구, 8월 5422가구로 지난 8개월

간 18.8%(1258가구) 감소했다. 월평균 2.9%씩 줄었다.

‘서울형 주택바우처’는 주택에 월세로 거주하는 가구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아래이거나 전세 전환가액이 9500만원 이하인 가구에 임대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저소득 시민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02년부터 서울형 주택바우처 사업을 시행해왔다. 올해 총 9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작년 11월 종로 국일고시원 화재 사

고로 7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자 시는 ‘노후고시원 거주자 주거안전 종합대책’을 내놨다. 그동안 주택 거주자에게만 지원했던 서울형 주택바우처 제도를 확대해 7월부터 고시원 거주자에게도 매달 5만원의 월세를 지원하기로 했다.

수혜 대상이 늘었음에도 임대료를 보조받는 저소득층 가구는 줄었다. 서울형 주택바우처로 월세를 보조받은 가구는 6월 5695가구에서 7월 5526가구, 8월 5422가구로 지원 대상 확대 후 4.79%(273가구) 감소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부에서 주거급여 수급자 기준을 지난해 중위소득의 43% 이하에서 올해 44% 이하로 확대하면서 서울형 주택바우처 수혜 대상자들이 주거급여 지원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이라며 “단순히 1%만 줄어들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서울형 주택바우처 지원자들이 기준 중위소득 43~44% 구간에 몰려 있어 실제 수혜자 중에서 6% 정도가 이동하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 1~8월 주거급여 지원 사업을 통해 주거비를 보조받은 가구는 월평균 1.27% 증가했다. 주거급여수급 가구는 올해 1월 17만8764가구에서 2월 18만1403가구, 3월 18만3739가구, 4월 18만7179가구, 5월 18만9864가구, 6월 19만1787가구, 7월 19만3485가구, 8월 19만5243가구로 최근 8개월 동안 9.22%(1만6479가구) 늘었다.

주거급여란 중위소득 43% 이하인 가구에 임차료나 주택 개보수 비용을 지

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시비 1234억 3400만원을 포함 총 3879억3500만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월 최대 23만3000원(1인 가구 기준)을 받을 수 있어 같은 조건이라면 월 5만원을 정액 지원하는 서울형 주택바우처를 신청하는 것보다 주거급여를 지원하는 게 더 유리하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형 주거복지제도 수혜자는 국가에서 지원받을 수 없는, 제도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며 “정부에서 중위소득 43% 이하를 지원하면 시는 중위소득 44~60%를 지원하는 식이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서울형 사회보장 제도가 부서별로 다양하게 생겨나다 보니 수급자 입장에서는 여러 개를 신청해야 해 불편하게 느낄 수 있다. 신청 시스템의 서류들을 통일하기 위해 TF팀을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라며 “신청 서류를 간소화해 주거복지 서비스 대상자들의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미세먼지 무단배출 사업장 67곳 적발

서울시 자동차정비 공장 57곳 등
기준치 120배...40곳은 검찰 송치

서울시는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67곳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시가 적발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발생물질 오염도를 검사한 결과 사업장 1곳당 미세먼지 유발물질인 탄화수소가 1만2075ppm에 달해 기준치(100ppm)를 120배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연간 미세먼지 발생 오염물질 배출량으로 환산하면

1개 업체당 622kg에 달한다. 점검받은 지난 3월 19일부터 4월 17일까지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92곳에서 공회전 여부, 오염물질 배출실태 등을 확인했다. 자동차 정비 공장 57곳, 무허가 도장 사업장 6곳, 금속 열처리·표면처리 사업장 4곳 등 총 67곳이 적발됐다.

시는 이 중 40곳을 불구속 기소의 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나머지 27곳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시는 향후 자동차정비업소 밀집지역을 특별 관리대상으로 지정해 전수 조사하고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미세먼지 배출 집중 관리 지역, 취약계층 지역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김의승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이번 단속은 고농도 미세먼지 시정제 도입에 대비해 이뤄졌다”며 “생활권 내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을 집중 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관리해 미세먼지 없는 생활환경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제1회 전국체전 개최지 기념표식 제막식

강태웅 서울시 행정1부시장 및 대한체육회 관계자들이 10일 오전 서울 중구 배재학당역사박물관에서 제1회 전국체육대회 개최지 기념 역사문화유적 표식 제막식을 하고 있다. 역사문화유적 표식은 사라진 문화유산 터나 역사적 사건 현장을 기념하고자 관련 내용을 표식에 담아 설치하는 제도다. /연합뉴스

경기도 특사경 가짜 친환경업체 적발

환경 인증을 받지 않은 일반 농산물에 친환경 인증 표시나 광고판을 부착해 판매한 농가와 유통업소가 경기도 수사망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7월 26일~9월 26일 도내 친환경 인증 농가, 재포장 취급자, 유통판매업소 등 216곳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여 친환경농어업법을 위반한 11곳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과정에서 41개 제품에 대해 잔류농약 314종을 검사한 결과 포도 1개 제품에서 잔류농약이 검출됐다.

이번에 적발된 항목은 미인증제품에 인증 표시·광고(9곳), 미인증 취급자가 친환경 농산물 재포장(1곳), 인증 제품과 미인증 제품을 동일 장소에서 혼합 작업(1곳) 등이다.

가평군 A 씨는 지난해 8월 친환경 인증 기간이 종료됐는데도 자신이 생산한 포도 5kg들이 40상자에 올해 9월까지로 친환경 인증표시(무농약)를 부착해 로컬푸드 매장에서 판매했다. A 씨가 판매한 포도에서는 친환경 농산물에서 금지된 잔류농약(이미녹타린 0.0343mg/kg)이 검출됐다. /의정부(경기)=김승열 기자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시민 의견 듣는다

서울시는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과 관련해 연말까지 온·오프라인을 활용, 시민 소통을 강화한다고 10일 밝혔다. 보다 폭넓은 소통 요구가 있었던 만큼 시민 목소리를 더 치열하게 담아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을 완성하겠다는 것이다.

시는 ‘경청·토론·공개’를 기본 방향으로 시민과 적극 소통한다는 방침이다. 전 과정은 온·오프라인으로 투명하게 공개한다.

전문가 공개토론, 시민 대토론회, 현장 소통, 합동 토론회 등을 추진한다.

서울시 영유아·산모건강 위해 가정 방문

서울시는 ‘서울아기 건강첫걸음’ 사업이 보건복지부의 국가 정책으로 채택돼 내년부터 전국 20개 보건소에서 시범사업으로 시행된다고 10일 밝혔다.

서울아기 건강첫걸음은 보건소의 영유아 건강 전문 간호사가 출산 가정에 찾아가 아기와 산모의 건강을 살피는

전문가 공개토론은 18일부터 시작해 4차례에 걸쳐 실시된다. 1차에서는 논의 주제를 열어두고 4차까지 토론의 쟁점을 정리해가는 형태로 진행된다. 광화문시민위원회, 시민단체, 시민단체 추천 전문가 등이 참여하고 시민 누구나 참관할 수 있다.

시민 대토론회는 원탁토론 방식으로 운영된다. 희망자 총 300명을 모집해 12월 7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15일 세종문화회관에서 두 차례 연다. 서울시 거주 19세 이상 성인이면 참여 가능하다. /김현정 기자

프로그램으로 지난 2013년 도입됐다. 320시간의 전문 교육과정을 거친 찾동 간호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해 모유 수유, 아기 돌보기, 산후 우울 관련 상담과 정보를 제공하며 직접 도와준다. 도움이 더 필요한 가정은 아이가 두 살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방문해 관리해준다. /김현정 기자

경기도, 교통정책 전담 ‘교통본부’ 출범

31개 시·군 교통수단 통합관리 등

경기도가 내년 ‘경기교통공사’ 설립에 앞서 전 단계로 경기도시공사 내에 ‘경기교통본부’를 출범했다.

경기도는 10일 오전 의정부시에 있는 경기도시공사 북부본부에서 교통공사 설립의 디딤돌 역할을 할 교통본부 개소식을 했다.

경기교통공사는 경기지역 31개 시·군의 대중교통 체계를 통합 관리하는 교통정책 전담기관으로, 현재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이 진행 중이며 용역이 완료되면 내년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쳐 개소할 예정이다.

교통공사는 31개 시·군의 버스·철도 등 교통수단 통합관리, 노선입찰제 방식의 버스 준공영제 운영과 관리, 환승 주차장 등 광역교통시설 확충, 신교통수단 운영 등의 기능을 하게 된다.

경기교통본부는 교통공사 운영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교통공사 설립 전까지 운영하는 기구로, 교통공사 설립 준비, 공사수행사업 설계, 준공영제 시범사업 시행 등의 역할을 한다.

경기도시공사의 1개 본부로 운영되며 1본부 2팀 9명으로 구성된다.

경기도는 교통본부 개소식과 함께 내년 노선입찰제 준공영제에 참여하는 19개 시·군, 경기도시공사와 ‘경기도형 준공영제(노선입찰제) 시행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노선입찰제 준공영제는 영구면허로 운영하는 수입금공동관리 형태의 현재 준공영제와 달리 버스 노선을 공공이 소유하고 경쟁입찰을 통해 선정된 운송사업자에게 한정면허를 부여해 버스 운영을 위탁하는 제도다.

경기도는 최초 5년에 갱신 4년 등 최대 9년까지 계약을 한 뒤 재입찰을 원칙으로 한정면허를 부여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이달 중에 광역버스(직행좌석형 시내버스) 16개 노선에 대한 입찰공고를 해 준공영제 시범사업에 참여할 운송사업자를 모집,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할 계획이다.

16개 노선은 반남 또는 폐선 노선 4개, 소외지역 노선 3개, 택지지구 노선 9개 등이다.

/의정부(경기)=김승열 기자 kimsy@